

미래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증가합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9.11.(금) 한국경제는 「미래기금에 교부세 뺀 지자체…‘재정 어려워, 우리몫 더 달라’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내년에 ‘162조원+α’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잇따라 손을 벌리고 있다.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아 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”고 하면서,
 - “미래대응기금의 기능을 본래 재정 안정화 장치에서 일반회계 사업 지출까지 넓히면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 ‘적금 통장이면서 동시에 입·출금 통장 역할까지 하는 이상한 구조’, ‘청년·미래성장동력 등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 상당수가 기금 사업으로 편입’,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담는 것은 비효율적이며, 기금 사업의 경우 국회 통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① 지방교부세 총액은 '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내년도 지역별 배분액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- '27년도 지방교부세*는 77.2조원으로 '26년 본예산 대비 +7.8조원 증가(+11.3%)할 전망입니다.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(보통+특별) 전년 대비 +6.1조원(+9.6%) 증가합니다. 다만, '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,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* 지방교부세: 정률교부세(보통+특별)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

- 또한, 추세기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, '26년과 '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'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하여 중기 전망 상 '30년까지 지속 증가*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지방교부세(조원): ('26년) 69.4 ('27년) 77.2 ('28년) 101.0 ('29년) 117.1 ('30년) 120.7

②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, 지방재정의 위축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는 재원은 지방정부에 매년 통상적으로 교부되던 부분이 아니라, 내국세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더 걷힌 부분에 한정됩니다.

- 또한, 이렇게 적립된 재원은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('27안 3.5조원)등으로 다시 지방에 지원될 뿐 아니라,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.

- 그간 일반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주의 하에서 세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인세 등 내국세 변동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급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. '05년도 이후 교부세가 전년대비 10% 이상 급증*한 사례가 10회, 감소**한 사례가 6회에 달합니다.

* 증액사례: ('21~'22년) +36.8%, ('07~'08년) +23.4%, ('20~'21년) +17.7% 등

** 감액사례: ('22~'23년) △16.7%, ('19~'20년) △12.7%, ('08~'09년) △9.0% 등

- 특히, '23~'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('23년 56.4조원, '24년 30.8조원)이 발생하여 지출 불용, 지방교부세·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세수 변동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·지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입니다.

- 내국세 세입이 추세기*를 상회하는 경우에는, 해당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한편,

* 전전년도 내국세 결산액 x (최근 10년 내국세 평균 증가율)²

- 경제상황·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*을 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.

*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③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재원 외에 ~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.

③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합니다.

-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지원, 국가전략기술 육성, 대규모 지역 산업 인프라 개선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
-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완적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·일자리·소득 여건이 개선되고, 신규 세원도 발굴되어 지방정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,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·성장동력·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,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광역·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.

④ 미래대응기금은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, 기존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은 복지, 일반행정, 국방 등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,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축인 청년, 성장동력, 지방, 교육·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.
- 4대 중점 투자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중 NEXT 원칙*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하였으며,

- * ❶ (N: New-Capital) 인적·물적 자본형성에 투자하는 사업
❷ (E: Enterprising)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
❸ (X: fleXible)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
❹ (T: Timely)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

-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인 추가세수가 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의 혜택을 특정 세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.
- 미래대응기금은 기존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.
 -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규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. 총 13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9개, 기존사업은 51개로, 신규사업 비중이 60%를 넘습니다.
 -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기존사업(51개)도 단순 이관이 아니라, 투자의 속도와 규모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관하였습니다.
- 미래대응기금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,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	단 장	박성훈 (044-214-23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지방재정팀	책임자	팀 장	박민정 (044-214-3190)
		담당자	사무관	고병국 (kobk22@korea.kr)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	책임자	과 장	지용구 (044-205-3751)
		담당자	사무관	권순현 (kirin161@korea.kr)